

# 경제주평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승, 자영업자와 청년층 부담 급증

# 목 차

---

##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승, 자영업자와 청년층 부담 급증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국내 가계부채 및 시장금리 현황 .....	2
3.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5
4. 시사점 .....	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승, 자영업자와 청년층 부담 급증

#### ■ 개 요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누증되고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시장 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내 가계대출은 2021년 중 10%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은행대출과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중에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져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수준별, 종사상지위별, 연령대별로 가구주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와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국내 가계부채 및 시장금리 현황

**(가계부채 현황)** 최근 국내 가계대출은 2021년 4분기 기준 1,756조원 대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고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부채의 질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은행대출에 비해 대출조건이 취약한 비은행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며 2021년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최근 크게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구조가 악화된 가운데 가계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가계의 금융취약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금리 현황)** 국내 시장금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빠른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은행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4월까지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코픽스금리와 가계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향후 미 연준의 추가적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예상되고,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가능성, 높은 소비자물가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는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금리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특징과 가계 재무건전성 현황을 고려할 때 가계가 직면한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와 과거 금리상승기(2010.7.~2012.6.)의 가계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2021년 상테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p, 1%p, 2%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금융부채 보**

**유가구**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상환비율(DSR)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가구주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 2%p 상승시 DSR이 약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시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약 210만원 증가하고, DSR은 약 3.4%p 상승하여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연령대별로는 대출금리 2%p 상승시 청년층 가구의 DSR이 2.9%p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연간, 만원, %)

가구주 특성별		대출금리 상승폭				
		Base	+0.5%p	+1.0%p	+2.0%p	
금융부채 보유가구		이자비용	329	369	409	489
		DSR	32.4	33.1	33.7	35.1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이자비용	184	205	227	269
		DSR	40.2	41.1	42.1	44.0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	이자비용	433	486	538	643
		DSR	39.6	40.5	41.3	43.0
연령대별	청년층	이자비용	279	320	360	441
		DSR	35.2	36.0	36.7	38.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1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대체.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하위 30%를 의미

주 2 : Base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DSR로, 금리충격 발생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상태를 의미함.

#### ■ 시사점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가계부채 양적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 1. 개요

-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누증되고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
  -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동시에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
    - 가계대출은 '21년 중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756조원대로 누증
    - 최근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타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부채의 질 악화도 우려
  - 대내외 여건상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연중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음
    - 현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크게 확대된 상황
    - 우리나라도 높은 소비자물가 상황,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 축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
  - 이에 본 보고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분석
    - 변동금리 비중 등 최근 국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이 과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우려
    -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영향과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시사점을 도출

<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



자료 : OECD.

주 : 전년동월비 기준.

< 최근 한미 정책금리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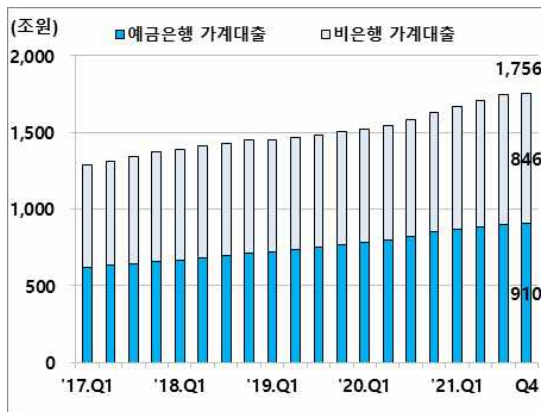
주 : 한국의 5월 기준금리는 5/20기준.

## 2. 국내 가계부채 및 시장금리 현황

### ○ 최근 국내 가계부채는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부채의 질도 악화

- 국내 가계대출은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
  - 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1)
  - '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분기까지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가계대출은 1,756조원대까지 누증된 상황
- 최근 가계대출은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부채의 질 악화가 우려
  - 은행대출에 비해 대출조건이 취약한 비은행 가계대출은 최근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가운데, '21년 4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48.2%(846조원/1,756조원×100)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2)
  - 또한,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 증가세가 2021년 이후 크게 확대되며 부채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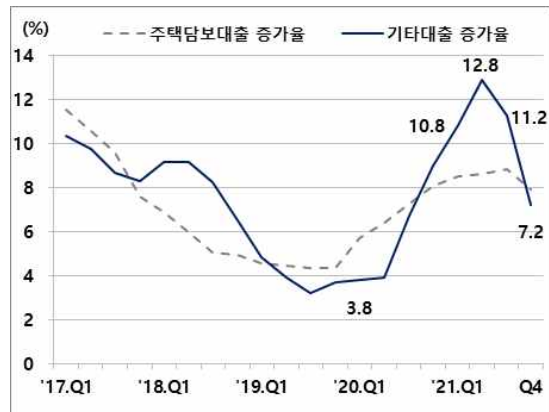
<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비은행 가계대출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을 포함.

<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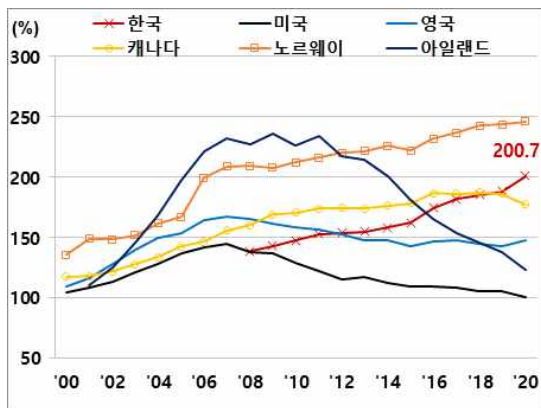
주 1 : 기타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

주 2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

1) 국내 가계대출은 2021년 1분기 9.5%, 2분기 10.5%, 3분기 9.9%, 4분기 7.6% 증가(전년동기비).  
 2) 비은행 가계대출은 2021년 4분기 전년동기비 8.1% 증가하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율(7.1%) 상회.

-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취약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
-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과 달리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0년 기준 200%를 돌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조정을 경험하여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sup>3)</sup>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부채 조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 시에도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sup>4)</sup>
  - 저소득층(하위 30%) 가구는 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중(DTA)이 타 소득계층 대비 높은 수준이며, 부채상환비율(DSR)도 40%를 상회<sup>5)</sup>
  - 자영업자 가구의 DTA는 타 종사상지위 가구에 비해 높고, DSR도 39.6%로 DSR의 임계치인 40%에 다다른 것으로 우려
  - 청년층(39세 이하) 가구 또한 DTA, DSR로 평가한 재무건전성이 타 연령대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추이 >



자료 : OECD.

< 금융부채 보유가구 재무건전성(%) >

가구주 특성별		재무건전성 지표	
		DTA	DSR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27.0	40.2
	중소득층	26.6	35.1
	고소득층	25.0	29.0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25.6	30.5
	임시일용직	25.2	22.4
	자영업자	27.6	39.6
연령대별	청년층	32.8	35.2
	중년층	25.7	33.2
	고령층	22.4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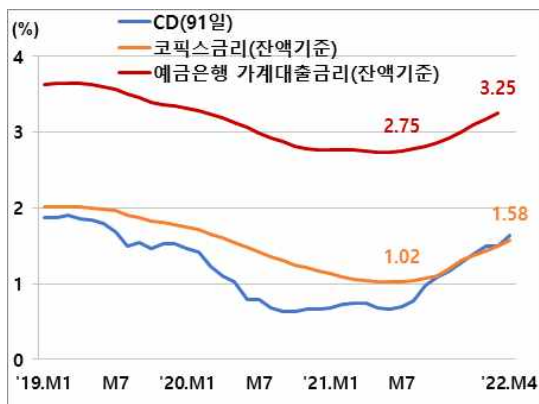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3) 미국, 영국, 아일랜드 외에도 스페인, 덴마크, 독일 등의 국가가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하였음.  
 4)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9,406가구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하위 30%, 고소득층은 상위 30%를 의미하며, 청년층은 39세 이하, 중년층은 40~50대, 고령층은 60세 이상을 의미.  
 5) 본 보고서의 부채상환비율(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연간 가처분소득)×100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는 DSR의 임계치로 40% 미만을 저DSR, 70% 이상을 고DSR로 구분.

○ 국내 시장금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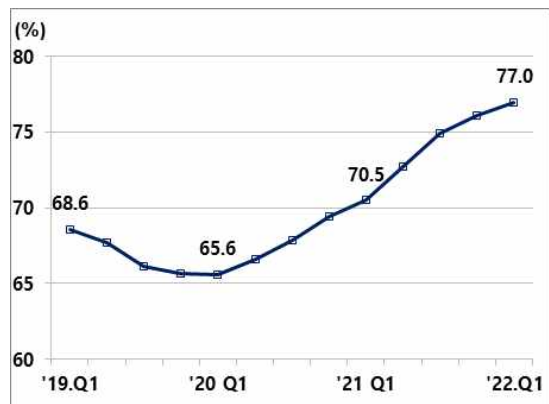
- 국내 시장금리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빠르게 상승
  - 대표적인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금리는 2021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가계대출금리 또한 상승세가 확대되며 2021년 7월 2.75%에서 2022년 3월 3.25%까지 상승
- 향후 한국은행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 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
  - 특히, 향후 미 연준의 추가적인 빅스텝도 전망되는 상황으로, 한국은행의 연중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최근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2022년 1분기 잔액기준 77.0%를 기록하며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음
  - 향후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금리상승의 충격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잔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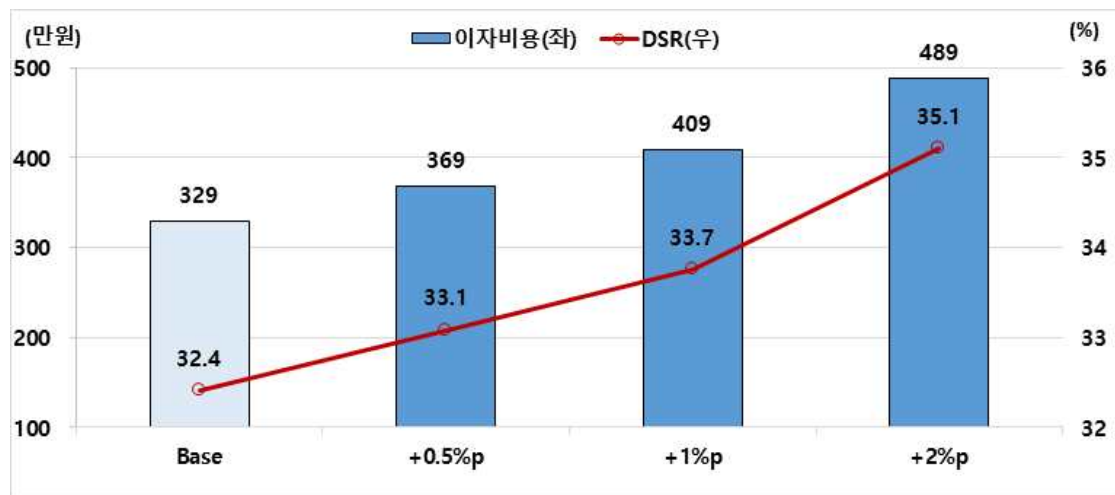


### 3.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

- 2021년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p, 1%p, 2%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환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평가
  - 현재 대출금리 상승 속도와 과거 금리상승기(2010.7.~2012.6.) 가계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출금리가 0.5%p부터 최대 2%p까지 상승함을 가정
  - 가구별 대출금리 관련 미시자료의 제약 하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적용하여 분석
-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커지는 한편, DSR로 평가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160만원 증가하며, DSR은 32.4%에서 35.1%로 약 2.7%p 상승

<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DSR 변화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1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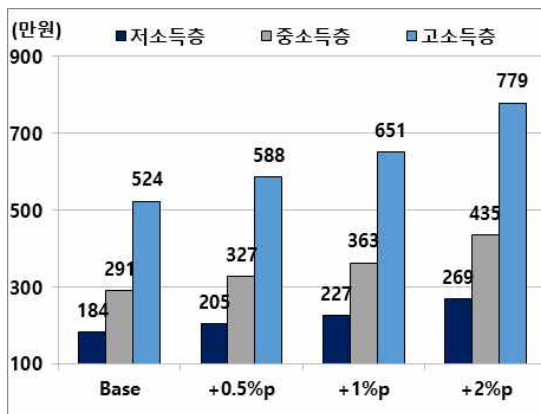
주 2 : Base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DSR로, 금리충격 발생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상태를 의미함.

6) 최근 기준금리가 0.5%(2021.7.)에서 1.5%(2022.4.)로 인상되는 동안 국내 가계대출금리는 잔액기준 2.75%(2021.7.)에서 3.25%(2022.3.)로 약 0.50%p 상승하였음. 향후 기준금리가 2~3차례 인상되어 2.0~2.25%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거 기준금리가 약 17개월 만에 2.0%에서 2.25%로 상승했던 시기(2010.7.)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21%로 현재의 3.25%보다 약 2%p 높은 수준.

① (소득수준별)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은 고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저소득층은 부채상환비율(DSR)이 큰 폭으로 상승<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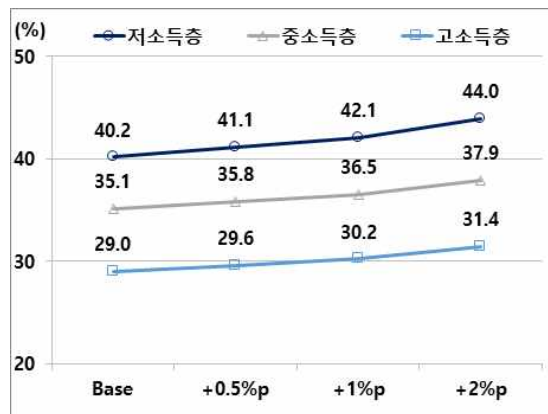
- (이자비용) 대출금리가 최대 2%p 상승할 경우 고소득층의 평균 이자비용은 약 256만원 증가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크게 증가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고소득층(상위 30%)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base 524만원에서 779만원까지 증가
  - 이는 소득이 대출 심사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부채규모가 타 소득계층 대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DSR) 대출금리 2%p 상승 시 고소득층의 DSR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DSR은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크게 악화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의 DSR은 40.2%에서 44.0%까지 약 3.8%p 상승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
  - 동 시나리오 하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까지 약 2.4%p 소폭 상승하며 높은 이자비용에도 양호한 부채상환비율을 유지
- 저소득층은 타 소득계층 대비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DSR이 40%를 상회하는 동시에 가장 큰 상승폭을 경험

< 소득수준별 이자비용 변화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소득수준별 DSR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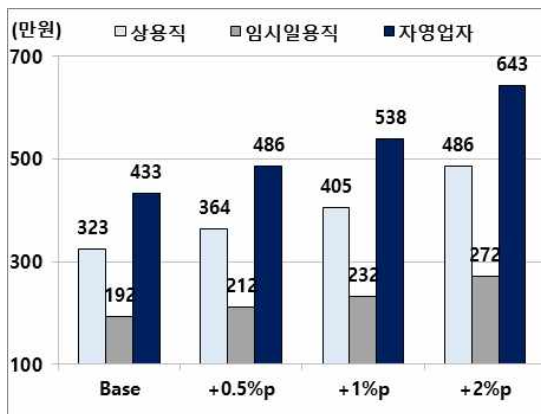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7)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하위 30%, 고소득층은 상위 30%를 의미.

② (종사상지위별) 자영업자 가구는 타 종사상지위에 비해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부채상환비율(DSR)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무건전성 악화<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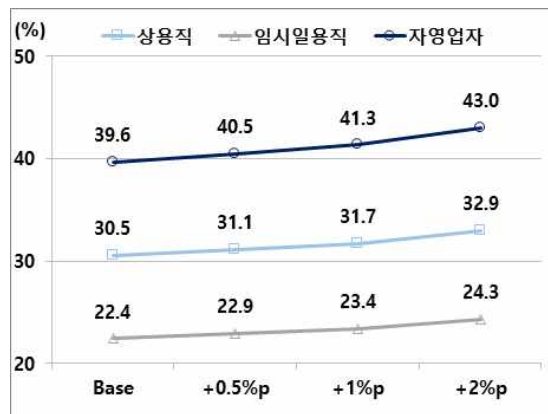
- (이자비용) 대출금리가 최대 2%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210만원 증가하며 타 종사상지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은 433만원에서 643만원까지 증가하며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
  - 이는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상 대출 수요가 상용직 등 타 종사상지위 가구에 비해 높고, 그에 따라 보유한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DSR) 대출금리가 최대 2%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3.4%p 상승하며, 특히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39.6%에서 43.0%까지 약 3.4%p 상승하며 타 종사상지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자영업자 가구를 산업별로 분석할 경우<sup>9)</sup>, 대출금리 2%p 상승 시 숙박·음식점업 종사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base 56.6%에서 60.8%까지 상승
- 자영업자 가구는 평균 이자비용과 DSR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이자비용 변화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종사상지위별 DSR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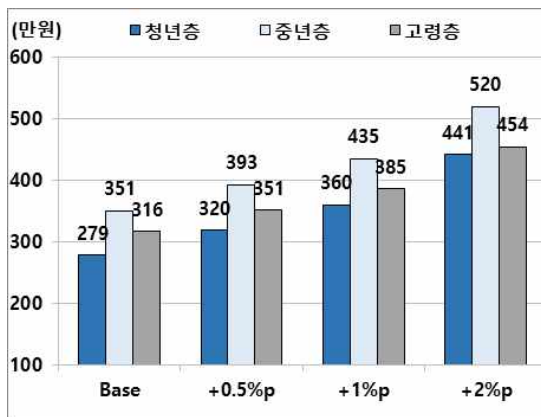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8)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를 포함.  
9)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종사 산업 상위 4개는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임.

③ (연령대별) 이자비용은 중년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부채상환 비율(DSR)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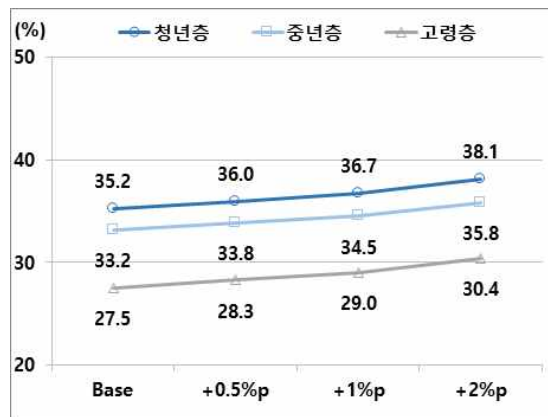
- (이자비용) 대출금리가 최대 2%p 상승할 경우, 중년층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은 169만원 증가하며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중년층(40-50대)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base 351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증가
  - 이는 소득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층 가구가 보유한 부채규모가 타 연령대 대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DSR) 중년층 가구의 DSR은 높은 이자비용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청년층의 경우 DSR의 임계치인 40%에 가까운 38.1%까지 상승
  - 대출금리가 base 대비 2%p 상승할 경우 청년층(39세 이하) 가구의 DSR은 35.2%에서 38.1%까지 약 2.9%p 상승하여 타 연령대 대비 큰 상승폭 경험
  - 동 시나리오 하에서 중년층 가구의 경우 높은 이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2%p 상승 시 DSR이 2.6%p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 유지
- 청년층 가구는 소득 대비 보유한 부채 규모가 과도하여 DSR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대출금리 상승 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됨

< 연령대별 이자비용 변화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연령대별 DSR 변화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  
주 : 가처분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10) 청년층은 39세 이하를, 중년층은 40~50대를 의미하며, 고령층은 60세 이상을 의미함.

#### 4. 시사점

첫째,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 2021년 하반기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양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함
- 다만, 국내 가계대출이 주택 수요와 관련이 높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대출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또한, 현재 국내 경제 여건에 여러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양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주택시장 위축과 실물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둘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 2022년 중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대책이 필요함
- 특히, 현재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타 계층대비 크게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정부 및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만기도 이미 세 차례 연장된 만큼, 향후 만기 도래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정책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